

‘노인 부양’ 책무 사회적 품앗이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요양보호사 공급, 수요 못 따라가
외국인력 유입 신중한 검토 필요
보호사, 근로시간 연장·임금 상승
“국가가 돌봄 책임, 보편적 복지”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환자 확산과 맞물려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 부양이라는 책무를 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인력난·고령화 ‘심각’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험 시행 전엔 호봉제로 운영돼 1년마다 급여가 소폭 상승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호봉제 폐지로 최저임금만을 받게 됐다. 이는 젊은 인력의 대거 이탈로 이어지며 인력난과 고령화를 부추겼다.

2008년 이후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11.5%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109만 명까지 늘어나 요양보호사의 돌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시·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시의 장기요양기관은 890곳·정원 1만171명이었

고 전남도는 장기요양기관 1366곳·정원 1만988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2.3명인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를 내년부터 2.1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도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력 유입 방안 찬반 엇갈려

정부의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순천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수부 전남노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력 문호 개방 정책에 대해 “여전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많고 지원자도 충분하다”며 “센터장을 하면서 인력난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급자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단순 가사노동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통해 소통을 나누는 것도 요양보호사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상대로 돌봄을 할 때 다른 문화와 정서에 따른 고충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복지 전문가 이정화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10년 후엔 지금보다

도 더 거대한 고령 집단이 형성되고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매년 증가할 텐데 그만큼 요양보호사 공급이 현재 인구 구조상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미 선진국들은 외국인력으로 해당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된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를 외국인으로 메꾸는 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당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매스컴에선 수급자가 폭언·학대를 당하는 걸 주로 다루지만, 실상은 그 반대 사례가 확연히 많다”며 “금전적으로도 합당한 진전이 필요하지만, 보호사들 스스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심리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수급자 모두 “제도 보완”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년 전부터 광주 북구의 강남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노모(67)씨는 “병원에서 근무하기엔 나이가 많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해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주변에서 일부 남성 수급자로부터 폭언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를 들어봤지만 직접 겪은 바로는 수급자의 보호자(자녀)가 문제였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수급자는 본인의 몸도 잘 겨누

지 못해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하지만, 수급자의 자녀들은 센터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호사 개인에게 몇 주간 휴직을 강요하기도 한다”면서 “시간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임금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쉽게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한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연장과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 전부터 자택에서 재가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안복자(72)씨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간 외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오후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추가 요금을 내고 근무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너무 적어 요양보호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되레 미안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시급을 올려줘야 수급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모(40)씨는 “시아머니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재가급여 신청을 통해 중증 1등급 판정을 받아 하루 4시간씩 간병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중증 1등급이기 때문에 24시간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제공

할 센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장기요양보험을 제공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지원은 받기 힘든 실정이다”며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서 한 달에 4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복지효과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여러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표출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 거쳐야 할 과도기로 분석했다.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에서 어렵게 도맡았던 돌봄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쏟아진 것”이라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과 제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요양보호시설이 생겨났고 수요도 증가했다. 요양센터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센터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사회적으로 피부양인을 요양보호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죄책감이 남아있다”면서 “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향상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부양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걸 재고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전남서 화재 잇따라 발생

광주 아파트·공장, 무안 주택 등

광주·전남지역 주택과 공장 등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3일 광주 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동구 운림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민 5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창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솟구치면서 입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 외에도 주택 내부가 전소되고 옷 세대까지 그을음이 번지는 등 재산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6분 만인 10시 55분께 완진됐다.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콘센트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4시46분께 무안 일로읍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47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현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69·여)씨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B씨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B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7시19분께 광주 광산구 안정동의 한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과 내부에 있던 기계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당국 추산 406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분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민현기·정상아 기자



악취 은행나무 열매 수거
광주 동구청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23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보행 불편 및 악취 등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 열매를 진동식 수확기로 수거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보류 해결해야”

학벌없는시민모임, 문제수습 촉구

광주지역 초·중·고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이 보류될 위기에 처하자 광주 시민단체가 시에 문제 수습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난을 내세워 20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일부(학생 1인당 5만 원 인상분)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에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과 관련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과 자치구 사이에 입장차가 생겨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시민모임은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던 짐을 도로 학부모 어깨 위로 올린다면 이는 시민을 조롱하는 일이다”며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비대면 방식 마약 유통한 30대 구속... 구매자 6명도 입건

경기도 야산 매장된 103g도 압수

텔레그램을 통해 62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유통·구매·투약한 마약사범 7명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118곳에 필로폰 186.75g을 숨기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20대 남성 B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광주 서구와 북구 일대를 돌며 특정 장소에 마약

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광주 118곳에 은닉돼 있는 필로폰 중 83.3g(2778회 동시 투약분)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일당이 상선으로부터 추가 수수하려 했던 필로폰 103.4g을 경기도 소재 야산에서 찾아내 압수했다.

이렇게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약 6억 2000만원 상당의 분량으로 62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B씨 등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광고를 보고 공급책과

채팅하는 방식으로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매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 범죄의 차단을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